

金 學 元 議 員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나눔은 사회적 자산이고,
고정된 틀에서 벗어난 유연한 사고는
“융합과 통섭”으로 살아 숨쉬는 도시를 생성한다.”

서구 제3선거구

한나라당 서구 제3선거구 김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성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대전의 사회복지시설의 현실을 보면서 한 시민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한파는 시민들의 온정마저 뚝뚝 얼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후원의 손길과 자원 봉사자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대전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은 시정현안 가운데 평소 관심을 가졌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정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재정보전 및 재원확보를 위한 대전시의 대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국가 경제성장률은 3%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 대한 대책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정부는 저성장 고물가의 덩, 성장 동력 쇠퇴의 덩, 저출산·고령화의 덩, 이데올로기적 경직성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과 분열의 덩을 풀어 나아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감세 등으로 초래된 재정상황 악화라는 이중의 덩을 헤쳐나아가야 할 또 다른 과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2010년부터 적용할 예정인 법인세율 인하와 내년부터 적용하는 소득세율 인하 등의 세제개편으로 인해 세수감소와 재정적자 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처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감세는 대전시 자체수입원인 소득할 주민세 감소를 초래하고, 내국세수와 연동하여 이전되는 재원인

보통교부세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께서는 내년예 대전시가 영향받는 이전재원 감소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감소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계획 및 대책은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또한 국책사업유치를 통한 국비확보 등과는 별도로 대전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자주재원 확보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연계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도 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을 위해 지난 11월 20일‘(가칭) 지방재정보전교부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정부가 신설하려는 ‘(가칭) 지방재정보전교부금’은 2004년 폐지된 증액교부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이고, 이는 지방재정보전을 위한 임시적 방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중앙과 지방 간 재원배분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여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재원을 지방에 이양하도록 하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양극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등 배분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같이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입원이었기 때문에 응익과세의 원칙에 따라 다시 지방세원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지역적 관련성이 높은 과세대상을 지방소비세화 하고, 법인·소득세 중 일부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과세자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며, 부담과 편익의 원칙이나 세제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로, 세원이 풍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세수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목으로 전환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유연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시장계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본 의원의 견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불균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른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공동으로 적극 대처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복지재원 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사회 및 빈부격차의 심화에 따른 사회복지 재정수요의 확대로 복지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재원의 약 70% 정도가 사회복지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분권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부칙에 따라 2010년부터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흡수·통합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방교부세법」 부칙규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만 보통교부세안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행정안전부와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는 지방에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을 국가로 환원해 국가에서 수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보건복지부는 분권교부세 가운데 사회복지사업 몫과 종합부동산세 세수 중 사회복지분야에 지원하는 금액을 합한 ‘사회복지교부금’을 신설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대로 대전시가 보통교부세로 재원을 확보 하여도 지방이양사업 중 복지수요가 많은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 ‘특정수요’ 항목으로 활용하느냐의 여부는 시장의 복지사업비로 활용할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재원입니다.

본 의원은 복지수요 증가를 충족하지 못하는 재정지원 감소로 야기되는 민원이나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2010년 이후의 복지수요에 대한 중앙부처 내 의 이러한 논의들 중 어떤 방안이 우리시의 복지재정확보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별도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산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지침 개정과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등에 관한 ‘대덕특구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금년에 20억 원을 투입하고, 2015년까지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덕특구 활성화 전략’은 종래의 하드웨어적 활성화

전략에서 특구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프로그램 가동으로 소프트웨어적 활성화 전략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과학기술의 상용화만으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세계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다양한 분야가 상호 ‘융합 또는 통섭’하여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융합될 수 있는 창조산업과 전문인력을 보유하는 것이 도시경쟁력을 결정짓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전시의 인프라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우리 대전시는 IT, BT, NT 등 차세대 융합기술 및 지방 최고의 고급 연구인력과 많은 전문 문화예술인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는 정부출연 연구소, 벤처기업 등 약 1천 개소 가까이 입주해 있으며, 고급 과학기술 인력만 해도 약 2만여 명 가까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KAIST, ICU 등 대학의 전문인력들이 왕성하

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력 규모도, 공식적인 단체 수만 350여 단체에 이르고 있으며, 1만 1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전문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 및 문화예술과 관련된 하드웨어적 인프라 면에서 대전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결코 뒤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구 20만 이상의 46개 도시를 대상으로 창조 산업에 종사하는 핵심계층의 인구분포도를 조사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대전시(19명)는 서울시(21.7명) 다음으로 창조계층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주시, 부산시, 대구시는 4내지 6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대전시는 이러한 풍부한 인프라를 고부가가치의 미래 신산업 창출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융합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자생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의 융합’,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생적 산업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대전시가 촉각을 곤두세워 유치하려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의 궁극적인 목적도 미래 신산업 창출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의 융합’은 생명공학과 나노기술의 융합처럼 연구자와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횡적융합과 기계공학과 우주기술의 융합과 같은 종적융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야 극대화된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은 과학적 사고와 직관 및 감성이 합쳐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시차원에서 이미 ‘과학과 예술의 융합’을 소재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육성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시와 컬처노믹스를 문화산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그리고 수도권외 과천시도 시차원에서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과천시는 지난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국립과천과학

관 개관기념 ‘2008 과학과 예술의 만남’ 행사를 통하여 전국의 전문과학인력과 문화예술인의 교류를 주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융합을 통한 산업화 단계는 아직까지 시도단계에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된 대전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월등한 여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인력들이 대전에 계속해서 애착을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과학과 기술의 융합’,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새로운 산업창출 제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일 이미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그 일정과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으로, 전문인력들 간 ‘소통 및 교류의 장’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융합의 전제조건은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상호 연계하여, 공식적·비공식적 모임과 같이 인적교류가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소통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시가 추진하는 창조도시 구현을 위해서라도 전문인력들이 충분한 소통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도시건설의 기본방향을 이미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설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는 여유공간이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운영하지 않는 우주탐험관, 인간과 과학관, 재생조형관 등 미활용공간을 시민, 과학계의 전문인력들과 문화예술인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차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제’ 시범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열섬화 완화, 녹지율 증가를 목표로 3천만 그루 나무심기, 3대 하천 생태복원사업, 시민공원 조성 등 ‘행복한 대전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들은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환경기반 확충사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으로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고 쾌적한 대전 건설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시책사업으로 정하여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에너지 부분에서 수송부분이 17%를 차지하고 있다는 실정을 감안하면, 대기오염이나 연료소비의 효율화를 통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대하여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시민환경단체(대전·충남 녹색연합)의 최근 3년간 조사 자료에 의하면, 대전시내 교차로(55곳)와 학교 및 주택가(56곳) 등 총 1백 11곳의 대기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교통량이 많은 주요 교차로 11곳에서 이산화질소(NO₂) 배출량이 국가 기준치(60ppb)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교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신호대기 차량들의 공회전으로 인한 이산화질소 및 미세먼지 배출로, 교차로 주변 대기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차로에서의 자동차 공회전은 대기오염 문제 뿐만 아니라 에너지 낭비라는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에 의하면, 교차로에서 대기 중인 차량 공회전 억제로 인한 연료절약 효과는 재시동에 따른 연료소모량을 감안하더라도 6초 이상만 정차하면 효과가 있으며, 자동차 1대당 연간 약 83리터를 절약할 수 있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리터당 1천 7백 원 기준으로 차량 1대당 연간 14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시가 교차로 대기차량들에 대한 ‘교차로 정지시 시동끄기 운동’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제’를 시행하면, 자동차 배출가스저감 효과와 에너지 절약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간결하면서도 분명한 신호 표시로 급출발에 따른

사고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면, 보행자나 운전자들의 안전성은 물론 대기시간 사전 예측으로 에너지 절감에 따른 경제 효과도 기대됩니다.

시장계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악 발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계는 지금 자국의 전통문화 지키기에 팔을 걷고 나서는데 반해, 대전시는 지나칠 만큼 서양음악 중심의 시책을 펼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우리 전통음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과 연정국악연주단 예산을 대전 문화예술의전당 예산과 비교해 보면, 2008년 대전문화 예술의전당 예산 총액은 81억 6천 5백만 원이고, 이중 기획공연 등에 쓰이는 공연예산만 무려 21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반면에,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의 경우는 총 예산 41억 4천 2백만 원 중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공연예산은 고작 2억 6백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시보다 늦게

출범한 전북도립국악원 2008년 예산은 무려 64억 1천 9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을 국악·연극·전시 중심의 문화 공간으로 특화시키겠다던 대전시의 정책의지는 도대체 어디로 실종되었습니까?

또한, 정원과 관련하여 전북도립국악원의 국악연주단 상임단원 수를 살펴보면, 대전시 연정국악연주단의 두 배에 가까운 1백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악강습을 위한 교수요원 20명, 학예연구실이 나 공연기획실에 소속된 15명을 포함하면 전북도립국악연주단의 정원은 무려 135명이나 됩니다.

그에 비해 우리 대전의 형편은 너무나 열악한 실정입니다.

1991년에 정원이 동결된 이후, 단 한 명의 상임단원 증원없이 65명의 상임단원들이 2007년도에는 163회 공연을 소화했고, 금년 11월 현재까지 123회 공연을 소화하면서 엄청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의 열악한 시설과 재정형편, 그리고 인력분야를 포함한 연정국악연주단 활성화 방안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의 브랜드 가치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전국 최초로 국악대중화 운동의 초석을 다진 연정 임윤수 선생과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은 이미 우리나라 국악발전사의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악대중화 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전만이 가질 수 있는 매우 독특하고 유일한 브랜드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이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이라는 지금의 명칭을 과거처럼 대전시립연정국악원으로 복원시키고, 국악운동의 효시였던 대전의 역사성을 되찾아 보자는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용국악원인 ‘대전국악당’을 신축하자는 것입니다.

중부권 최대의 ‘대전국악당’을 하루 빨리 마련하여, 첨단산업과 연계된 ‘국악관광상품’ 개발을 서둘러야 합니다.

현재의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은 건축한 지 30년이나 되는 노후된 건물로 국악연주단의 정상적인 공연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의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은 종전대로 다목적 회관의 기능을 살려 시민들에게 환원하고,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의 정상적인 연주활동을 위한 대전국악당을 조속히 신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정국악연주단원의 정원을 현실에 맞게 증원하여야 합니다.

대전시가 국악대중화운동 선두주자로서 명성을 되찾고, 우리의 전통음악을 소재로 대덕연구개발특구, 카이스트, 대전컨벤션센터 등을 찾는 많은 외국인이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대전만의 독특한 ‘문화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하천영구시설물 기부채납과 관련된 서류분실 의혹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주요 관심영역 중 한 부분일 것입니다.

지난 10월 8일 오후 5시 19분에 대전 최초의 주상복합건물인 ‘중앙데파트’를 철거하였고, 내년 6월 안에 ‘홍명상가’마저 철거하여, 2010년 상반기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간의 소문이나 언론에서는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의 소유권 귀속 주체가 누구냐에 초점을 두고, 이를 확인하고자 ‘당시 건축허가서와 기부채납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행방에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 동안 제기되었던 갖가지 의혹들은 이렇습니다.

“홍명상가는 1992년 3월, 중앙데파트는 1994년 12월 말로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서대로 이행한다면 대전시에 귀속되어야 한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2005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기부채납 관련 계약서의 소재파악 등을 매듭짓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하는 등 국정감사에서도 단골 메뉴로 거론되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대전 참여자치연대)에서는 “여러 정황상

무료사용 기간을 끝으로 기부채납을 받기로 한 것이 자명하다.”며 “업무과실로 생긴 손해를 두리 몽실 시민들의 혈세로 부담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는 등의 ‘혈세 보상 논란’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7월 중에 지역 유력 일간지에서 1973년 3월 26일자 ‘대전시 도시 432’로 표기된 문건이 발견됐음을 적시하면서,

“기부채납 관련 서류분실 의혹을 불러 일으켰던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건축물이 대전시 소유가 아님을 입증하는 관련 문서가 발견돼 향후 건축물 보상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문건이 건축물에 대한 법적 보상 명분과 서류분실에 따른 의혹 해소 등의 단초는 제공했지만, 아직도 각종 의혹을 종식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시장께서는 비록 철거대상 건축물이 사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시민의 혈세로 보상비를 충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 없이 사업추진을 강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다수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시민 공동의 관심 사안이며, 각종 의혹들이 시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공식적으로 해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솔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재론의 여지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오늘 박성호 시장께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시정 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대전시 발전을 위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펼치는 시정운영이란 결국 시민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다 윤택하게, 그리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시장이 보여준 독특한 리더십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소신과 뜻심, 그리고 결단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